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 2013년 4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3월 30일 ~ 2013년 4월 12일

### 주요 키워드

- 1. 노바티스, 인도서 글리벡 특허권 소송 패해** :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함. 기각사유는 글리벡이 인도법에서 요구하는 참신성/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과거에 개발한 약을 다른 나라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해 독점적인 이득을 보던 수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2. 건보공단, 3단계 약가제도 제시** :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활동보고서 2탄을 공개함.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뉘었음. 단기, 중기 과제는 약품비 절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며, 장기 과제는 제약사의 유통구조와 원가를 보험자가 파악해 자유자재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함.
- 3. 기타** : 복지부 한국-사우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추진,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모, 김미희 의원 간병비 건보적용 법안 발의, 복지부 미혼 한부모에 70만원 지원, 김명연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우선지원 법안' 발의, 한림대의료원, 해외환자 유치 '적극 행보', 일동제약·멕아이씨에스 중동진출 MOU 체결, 정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연장, 공공제약사 설립방안 조만간 정부에 건의

### 1. 보건의료정책

#### ○ 김미희 의원, 간병비 건보적용 법안 발의 (4.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일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병비는 3대 비급여 항목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100% 국가 보장을 약속했으나 당선뒤 번복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의료 취약계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이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현 정부는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 의약품 부작용 보상제도 현실화 계획 (4. 3)

올해안에 의약품 부작용 보상 관련 입법과 센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차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주최한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활성화 공청회'에 참석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보상센터와 제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품 피해 구제사업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됐다"며 "4월부터 연구진과 사업 운영예산 및

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업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대만을 모델로 벤치마킹해 사업시행 전 리스크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부작용센터는 민간단체가 주체로 하고 자금조달은 정부와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 과장은 "정부가 본 사업에 재원조달에 일부는 부담할 수 있지만 피해액을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국가가 피해구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등이 부담하는 피해구제사업비를 '국가재정법' 상의 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정부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다.

#### ○ 건보공단, 3단계 약가제도 제시 (4.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의 유통구조와 의약품의 원가를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한 약가제도를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또 사용량과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3단계 시행방안도 내놔 주목된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3일 보건 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활동보고서 2탄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표한 첫 번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담겼던 내용보다 약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쇄신위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눴다. 단기, 중기 시행방안들은 약품비 절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지만, 장기 시행방안은 제약사의 유통구조와 원가를 보험자가 속속들이 파악해 자유자재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공단이 내놓은 약가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장기과제이다. 장기과제는 총액 관리방안, 약품비 직불제, 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 도입 등이다. 장기과제에는 공단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시작한 공공제약사 설립과 과거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된 보험자가 직접 제약, 유통 업체에게 약품비를 지급하는 약품비 직불제 등이 담겨 있다.

#### ○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4. 4)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정부, 의료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모두가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협소 및 피부양자 제도, 지역가입자의 부과대상에서 재산 및 자동차 비중의 과다 등이 불공평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소득과약물의 한계 때문에 불공평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공급자 단체는 보장성 확대에 앞서 1차 의료 활성화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유승민 이사는 "사회적 합의가 현재까지는 미비한데, 1차 의료 활성화 등을 손을 잘 보면 거기서 확보되는 재원을 가지고 보장성 강화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한 이유는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면 보장성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정부 지원들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TFT를 구성해 올해까지 보험료 부과체계와 비급여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복지인력개발원, 국가 결핵관리 전문가 양성 (4.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국 253개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결핵관리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일 1기 26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결핵발병률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진행되는 필수교육이다. 각 회당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교육은 ▲결핵의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기본 이론 ▲국가 결핵관리 정책 및 지침 ▲결핵정보통합시스템 이용방법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용 원장은 "국가의 결핵관리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결핵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KOHI는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기획·운

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 국제보건의료포럼 창립기념식… 보건의료 입법 마련 (4. 6)

아시아 태평양지역 간에 보건의료분야 입법과 예산마련을 위해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입법 마련과 국제 교류를 위해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보건의료포럼’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보건의료 분야와 입법활동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질병퇴치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포럼 간사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다.

#### ○ 복지부, 미혼 한부모에 70만원 지원 (4. 7)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7일)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은 일주일 동안 최대 70만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청소년상담센터·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김명연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4. 9)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 질환, 18세 미만 아동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들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되면서 국가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평균 보험료가 2009년 2만7311원에서 2012년 4만4370원으로 3년 만에 1.6배가량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 ○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4. 9)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진이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하는 제도, 보고내용을 전체 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방향”이라며 “법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와 관련한 모든 단체가 협력해 보고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실수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실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오류 보고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시 처벌을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순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환자안전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해 무엇을 담을 건지, 각각의 비용 부담을 누가할 건지 등 인력확보에 대한 병원경영 부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 과장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자발적 보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인

센터브 등을 도입해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 복지부,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감지센서 설치 (4. 10)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화재·가스누출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소방서, 지역센터 등과 실시간 연계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 기본 설치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가구에 맥박센서, CCTV 설치 등이며, 대상지역은 서비스 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상북도 안동, 전라북도 전주 등 지자체 21개 시군구이다. 복지부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11월부터 응급안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 시범사업 추진 계기가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우선지원 법안’ 발의 (4. 11)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우선지원 해야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응급의료기관에는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직접 진료토록 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사유별로 보면 21개소의 응급진료기관이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각 지역응급기관 내과 및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이상 전문의만 두는 규칙을 시행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건보공단, 2년 후 원주로 이전 (4.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이르면 2년 후 원주 지역으로 이전한다. 공단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원주혁신도시에 본부 신사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6만7511㎡의 규모로 건축시공은 동광건설(대표 황철재)이, 책임감리는 무영아멕스 건축사사무소(대표 온정권)가 맡아 2015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 일부를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발주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생발전과 불공정거래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단은 본부 신사옥 착공에 즈음해 원주시청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원주시에 생필품(10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2010년부터 공단과 원주의 단강마을이 1사1촌의 자매결연을 맺어 특산물 구매 및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원주시와 유대관계를 강화해 원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모 (4. 1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29일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상급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6개소)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 등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병원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인건비(신규 충

원 간호인력)·교육비·시설개선비·운영매뉴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는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에게 전가된 간병 부담을 병원의 입원서비스 체계로 흡수하는 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돼 있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오는 17일 광주, 18일 대구, 19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 심평원, 다양한 ‘환자표본자료’ 제공 확대 (4.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 의료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2009년도 입원환자표본자료(HIRA-NIS-2009)외에 다양한 환자표본자료를 추가로 제작, 12일부터 공개한다.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받은 환자를 표본 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로 환자구분 대체기를 부여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 공개한 환자표본자료는 최근 2년(2010, 2011)의 전체환자표본(HIRA-NPS)과 입원환자표본(HIRA-NIS)이며, 5월에는 추가로 고령환자표본(HIRA-APS)과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환자표본자료를 다양화한 이유는, 특정영역의 표본을 따로 추출함으로써 해당영역에 대한 자료의 타당도 및 대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본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로는 SCI 논문 등 4편이 게재 완료(확정) 됐으며, 그 밖에도 게재 예정인 논문이 다수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표본자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사용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 2. 보건 의료산업/기술

#### ○ 日 의료분야 산업 활성화 위한 개혁안 진행 (4. 2)

일본이 의료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당은 의료기기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의원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안에 정부가 책정한 구체적인 시책과 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구체적인 활동 과제로 규제 재검토나 약사 승인의 신속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의 확충 및 수출 촉진 등을 명기했다. 나아가 관련 사업자, 연구자, 의료 관계자들의 상호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거점 정비 및 중소기업의 진출 촉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심사나 승인 등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늦어 애로사항을 느껴왔던 점을 개선하고 이 분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일본은 올 들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증 문서를 취득하는 확인 신청 제도를 단순화하는 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ips세포 지원안도 마련하는 등 의료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 ○ 미국 소득순위, 마취과 의사가 최고소득자 (4. 2)

미국에서 최고소득자는 마취과 의사, 최저소득자는 미용실 세발사로 나타났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최근 조사한 미국의 직업별 소득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최고소득자는 연평균 23만2000달러를 버는 마취과 의사였다. 또 최저소득자는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세발사로, 연평균 1만8000달러로 나타났다. 최고소득자의 순위는 외과의사(23만달러), 산부인과 의사, 구강악 외과의사(이상

21만6000달러), 내과의사(19만달러)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10위권에 든 것은 회사 최고경영자로 17만6000달러였으며, 10위권 밖에 석유 전문기술자(14만7000달러), 건축사, 변호사(이상 13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최저소득자는 음식점 종업원, 패스트푸드점 요리사, 접시닻이, 음식점 계산원 등이었다.

#### ○ 日 의료기기 등 수출에 민관합동체제 구축 (4. 3)

일본이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민관합동체제로 구축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진료나 검진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지원해 온 사단법인 의료우수재팬(MEJ)을 축으로 일본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연계한 해외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조직화하고 실행 체제를 정비하며 해외 정보 제공 등의 지원체제를 갖춘다. 이는 일본의 의료 기술을 신흥국 등에 전수 또는 이전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성장 시장으로서 의료기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서비스의 일체적인 해외 사업 전개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약 10건의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 혈당 측정기나 주사기를 이용한 당뇨병 예방 및 치료를 중국 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 ○ 화이자제약, 약 먹는 시간 알려주는 어플 출시 (4. 3)

한국화이자제약은 건강을 챙겨주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 ‘송중기 모바일 알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출시한 ‘송중기 모바일 알람 어플리케이션’은 바쁜 일상으로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현대인을 위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알람을 지정해놓으면 ‘송중기와 함께하는 꼼지락 영양체조’프로그램이 자동 재생돼 사용자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따라 할 수 있다. 또 직접 촬영한 동영상 혹은 사진 등을 메시지와 함께 미리 지정한 시간에 발송해주는 ‘멀티 메시지 서비스’ 기능도 포함돼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는 할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등에게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 한림대의료원, 해외환자 유치 ‘적극 홍보’ (4. 3)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산하병원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높은 의료수준 홍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의료관광 설명회(지난해 12월) ▲제20회 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지난달) 등에 참가했으며, 지난 2월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동영상 리포트 ‘South Korea invests in medical tourism’에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한국의 최신병원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소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해 12월 5일 아부다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UAE아부다비 의료관광 설명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등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한 행보에도 나섰다. 현재 중동지역에는 비만, 당뇨, 고혈압, 관절, 척추 환자가 많으며 의료기관과 전문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한 해 평균 3000여명이 해외진료를 받고자 태국, 인도,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지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영희 한림대의료원 국제교류팀장은 “한림대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관광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종교별 특징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현지화된 의료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아시아국가 위주로 해외환자유치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몽골을 찾았던 한림대의료원은 올해도 몽골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 ○ 김미희, 진주의료원 휴업에 긴급 상임위 소집 촉구 (4. 4)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시도를 정부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시도와 관련해 긴급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에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경상남도가 지난달 18일

진주의료원에 휴업예고를 발표한 후 3일 휴업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두 차례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지 말고 병원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휴업을 강행해 오는 5월2일까지 한달간 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폐업 방침 철회, 휴업 철회를 함께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 내과·정형외과 의료분쟁 최다 (4. 8)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내과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8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최근 1년치 중재원 이용 현황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상담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 기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80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3월엔 301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지난해 9개월간 접수된 503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내과·정형외과가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 ○ "한국 정신건강 진료시스템 고쳐라" OECD 권고 (4.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수전 오코너 OECD 자문관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OECD가 본 한국 정신건강정책 과제' 세미나에 발표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정신분열 등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가지도록 촉구하는 한편, 의료기관 입원에 기울어진 현재의 정신질환 진료 시스템을 고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권고했다. 또, 개별 부처가 정신건강 정책을 따로 시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쳐 범부처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 심평원, 전체 질병 및 검사·수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진료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실시 (4.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요청이 많은 건강보험 질병 및 진료행위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도) 국민이 진료한 61억4000여 건에 대해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코드별 통계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수가코드에 따른 행위별 통계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한편, 심평원은 질병 및 행위별 통계자료 5개년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자 및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관점별로 추이를 분석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은 요청 절차나 기다림 없이 질병통계 등을 즉시 제공받고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일동제약·멕아이씨에스 중동진출 MOU 체결 (4. 9)

일동제약과 멕아이씨에스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지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유통사와 중동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보건산업진흥원 UAE지사는 9일 열린 'Medical Korea 2013'에서 일동제약과 멕아이씨에스가 중동 메이저 유통 업체와 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일동제약과 멕아이씨에스는 민·관 협력으로 현지 유통사와 접촉해 MOU 체결에 성공했다. 진흥원 UAE지사는 지난 1월 '제38회 두바이 의료기기전시회' 기간 중 '한국 제약 및 의료기기 홍보회' 행사를 진행했고, 이때 중동 메이저 바이어인 라이프파마社와 알하야트社가 국내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출 촉진 MOU 체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중동에 의약품 제조공장을 갖춘 라이프파마사와 60여개의 의약품 원료제공과 함께 현지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는 수출협약을 맺었으며, 멕아이씨에스는 알하야트와 카타르 등 중동시장 대상 인공호흡기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 UAE 이영호 지사장

은 “이번 중동 바이어와 국내 기업들의 MOU 체결은 신흥 잠재시장인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국내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복지부, 한국-사우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추진 (4. 10)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쌍둥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에 똑같이 만드는 프로젝트(Medical System Twinning Project)가 진행된다. 한국-사우디 양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건의료 6개 분야(▲의료기관간 쌍둥이(Twinning) 프로젝트 ▲병원 설계 및 건립 ▲의료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Visiting Physician Program 및 전문가 상호방문 ▲보건의료 R&D 및 의료기술 이전 ▲의료 정보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사항에 관해 상호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쌍둥이 프로젝트란 한국 의료기관과 사우디 공공병원을 매칭해 사우디 내로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의료시스템, 문화 등을 그대로 전수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한국은 쌍둥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우디 보건부 산하 킹파드 왕립병원(KFMC)에 의료시설 건립, 한국 의료기술 전수, 줄기세포연구·생산시설을 건립 등을 진행하고, KFMC 내 뇌영상과학센터(가천길병원), 신경기초과학연구센터(삼성서울병원), 줄기세포연구·생산시설(파미셀), 방사능치료시설(원자력병원), 심장과학센터(서울대병원)에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시스템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우디 의료진의 교육·연수프로그램 및 한국측 의사들의 수술 시연을 위한 현지 방문, 컨설팅에 관한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안’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 의료기기 전체 허가·신고 사항 등을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심의업무를 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우려’를 표명했고, 의료기기 업체는 ‘환영’ 혹은 ‘무관심’을 보였다.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식약처에 적발되면 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이후 재적발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전체를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 심의대상을 줄여 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상 허가·신고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치수, 중량, 포장단위,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이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인데, 개정안에 따라 제조방법,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도 심의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수출용으로 허가·신고한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번역수준의 외국어 광고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심의면제 사실을 심의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 ○ 의료계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보해야” (4. 10)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보건의약 관련 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업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지역 주민들과 의료원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며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대책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았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보건의약단체는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담당으로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가 적자라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그렇다



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방문하고 홍준표 만나 (4. 1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진주의료원을 전격 방문하고, 폐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전날(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조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후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현재 33명) 및 직원을 만나 실태를 파악했다. 또 경남 창원에 있는 도청과 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오영 경상남도 의회 의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진 장관은 홍 지사와의 만남에서 "진주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홍 지사는 "정부의 예산 지원(500억원 정도)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 청와대 "진주의료원 최악의 상황은 안돼" (4.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등 6명은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및 폐업선언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의원들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은 "(진주의료원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며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에) 다녀오신 후에 이야기를 듣고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방문에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용익 의원은 이날 농성을 중단했다.

#### ○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병원 정상화 논의 시작 (4. 11)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뒤 45일만인 11일 오전 11시 진주의료원 회의실에서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조측에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강연배 교육선전실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박진식 부지부장 등 4명이 참가했고, 사측에서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 남경희 경영개선팀장 등 5명이 참가했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에 걸친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집행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여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제로 '노조가 아닌 직원과 재취업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경상남도의 기존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수차례 걸쳐 병원 정상화 방안을 밝혔음을 설명하였고, 노사대화가 시작된 만큼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을 중단할 것, 폐업을 전제로 하는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진주의료원 조합원 2명이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여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추가로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 정상화 의지와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홍준표 지사에 의한 노조 조합원, 도의원 등 총 16명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노사를 넘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도의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대화는 4월 12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4. 12)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의 내용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한다 ▲중양정부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등이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최근 진주의료의 폐업추진으로 공공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도 폐업을 추진해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3. 제약업계

#### ○ 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무효심판 승소 (4. 1)

보령제약이 노바티스와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테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특허를 전항 무효화시켰다. 이번 특허가 무효화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제약사들은 오는 6월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기존 100mg 제품뿐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으로 보다 안전하게 해당 품목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CJ제일제당 등 11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고 출시 준비 중이다. 보령제약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 노바티스, 인도서 글리벡 특허권 소송 패해 (4. 2)

스위스제약사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자사의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글리벡이 인도법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과거에 개발한 약을 다른 나라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해 독점적인 이득을 보던 수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바티스는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생산업체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값싼 약품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자료: 민중건강과 사회 17호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healthnews&id=20&page=1>

#### ○ 정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연장 (4. 2)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전담수사반은 범정부 차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체제로, 검찰 및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복지부 등 6개 기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1년 한시 운영(1년간)될 예정으로 출범했지만,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올해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수사반은 최근 대형 리베이트 적발 등 강력한 수사활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장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출범 첫 해인 지난 2011년에는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총 5200여명의 의약사를 적발,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올해에도 의료기기업체 및 중상위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약업계를 긴장케 했다. 최근에는 I 제약사 등 중견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했다.

#### ○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구매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4. 4)

정부가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2013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은 제약기업과 정보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당 정보 구매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정된 제약기업은 ▲국가별 시장 규모 및 현황 ▲경쟁사 및 경쟁제품 현황 ▲허가, 규제 및 가이드라인 ▲임상실험 및 특허정보 ▲약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규 시장 발굴 및 진출준비, 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 후보물질 발굴 등에 활용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데이터 접근 용이성 및 활용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제약기업에게 정보구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의약품 판매 모범계약서 여전히 논란 (4. 5)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의약품 판매 모범계약서’를 두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시각차가 여전하다. 무엇보다 ‘경쟁제품의 범위’가 논란거리다. 모범계약서는 제약사간 코마케팅 계약시 사용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모범계약서에서 ‘경쟁제품’의 범위를 동일성분 및 적응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품’ 개념은 동일성분 및 적응증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제약사가 둘 중 하나만 포함해 계약한다면 이는 조항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항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라 계약하는 건 괜찮다”고 모범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기존에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적응증으로만 설정해, (판매사의) 취급범위를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제품의 범위는 계약시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을 통해 판매사의 취급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제품’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이유다. ‘갑’(제조사)인 경우가 많은 다국적사는 경쟁제품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성분이 많지 않은 시장에서는 판매사가 너무 많은 경쟁품을 취급할 위험도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조항대로라면, 한 판매사가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와 ‘비리어드’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 외자사 관계자는 “을의 판매 영역이 너무 넓다. 같은 영역에서 여러 제품을 취급하면 제조사의 영업기밀이 새어나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을’(판매사)인 경우가 많은 국내사의 입장은 다르다. 다양한 성분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소염진통제 등의 경우 경쟁제품을 적응증만으로 제한하면, 판매사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적응증 하나로, 다른 제품을 못 팔게 하는 것은 횡포”라며 “모범계약서는 기존의 불평등 계약을 많이 개선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온도차로 코마케팅 계획이 있는 제약사들은 대부분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공공제약사 설립방안 조만간 정부에 건의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연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시행방안을 정부에 정책으로 건의할 계획이라 주목된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대학교 양봉민 교수에게 용역을 준 연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사회적 여론 형성 및 정책 건의 계획 등의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공단은 또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전문가, 국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후 정부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희귀의약품 공급과 제약사의 원가 파악을 이유로 공공제약사 설립 카드를 꺼냈다. 당시 제약업계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우려스런 반응을 보였으며, 공단은 연구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공제약사는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공급이 가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필수약품 공급거부에 대응해 특허권 강제실시의 실현 수단 차원에서 국영제약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공공적 생산을 통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제약사와 도매상 운영 자료를 통해 약가 적정관리 가능성 제고 등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내용 설명회 개최 (4.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8일 부터 2400여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RFID tag정보 연계방안 등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 내용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5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는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의 편의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스템 변경내용을 공유하고 시스템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의약품에는 의약품바코드 또는 RFID tag를 선택해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하고, 전문 의약품에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공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 RFID 유통정보를 연계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원활한 업무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다국적 제약사도 판매관리비 감소 (4. 10)

일괄 약가인하의 영향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신고한 23개 다국적 제약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판매관리비는 1조912억원으로 전년(1조1311억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3조6173억원) 감소율(1.9%)과 비교했을 때 다소 큰 폭이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3개 제약사의 매출액은 3조6173억원으로 전년(3조6875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 ○ 제약업계 임금협상 목표 인상률 타결할까? (4. 11)

제약사들의 임금협상 시기가 돌아왔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산하 의약품화장품분과위원회 소속 제약사(48개사) 중 대부분은 이달부터 2013년도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화학노련이 올해 제시한 목표 인상율은 7.2%. 이는 지난해 목표인상률(4.0%)에 비해 훨씬 높아진 수치로, 약가인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던 제약사들도 올해는 소폭이나마 임금을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노련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약업계가 침체돼 근로자도 수세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제약사도 약가인하에 대한 손익을 많이 판단해 어느 정도의 인상은 예측가능할 것”라고 말했다.

#### ○ 일본 정부 “복제약이 좋아요” (4. 12)

일본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사용 확대에 진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제네릭의 이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제네릭 조제사에 약품이 품질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정표를 제시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매뉴얼을 2014년 내에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수량 점유율을 지난해 말의 40%대(추정치)에서 2017년 말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네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한 약물로,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해 환자 부담 감소와 보험제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4. 의업단체 동향

#### ○ 의협, 6월 건정심에서 토요 휴무 가산제 무산 시 전면 투쟁 돌입 (3. 31)

“오는 6월 건정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의료계가 안고 있는 숙제들을 모두 다 걸고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 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제(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

러면서 오는 6월 건정심까지 3개월 동안 ▲일차의료활성화 위한 정부와의 대책 논의 ▲6월 건정심 대비 투쟁 준비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제도 홍보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에게만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민들에게도 저수가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의 문제를 적극 알려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3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서 희망찬 미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사퇴, 노환규 재신임 문제 논의 ... 토요일가산제 불발 책임 (4. 3)

윤창겸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토요일가산제가 불발돼, 오는 6월로 논의가 연기되자 이에 대한 책임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부회장의 정식 사퇴서는 오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지난 2월 노환규 의협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토요일가산제가 3월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노 회장은 재신임을 묻고, 윤 부회장은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환규 회장에 대한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노환규 회장까지 재신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 치과병원협회 신임 집행부 (4. 4)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정기이사회에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등 전문 의제도 관련 업무의 이관과 수련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문 의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조규성 부회장(연세대치과병원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또 감염관리 등 치과의료 질 향상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할 '치과의료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백광우 부회장(아주대병원)이 맡게 됐다. 협회는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질 향상, 경영개선,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오는 6월 학술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12월 초 치과의료 QI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 ○ 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가동 (4. 8)

한의협은 지난 6~7일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가칭)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특별기구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처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파생된 잘못된 정책임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관련 정책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 최근 천연물신약 6종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약처의 책임 있는 대응과 후속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 약사회, “독립 한의약법 의료이원화 고착...폐기해야” (4. 9)

대한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독립 한의약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다”며 “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의협, 비대위 전격 해체 (4. 10)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가동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6개월만에 해체하고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국의사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고, 투쟁을 이끌 투쟁체로서 비대위를 구성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그동안 비대위는 활동이 한정적이었다”며 “실행면에서 역

부족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발전적인 비대위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현 비대위를 전면 해체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대위의 역할은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될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는 의권 및 회원권익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협은 범의료계비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가칭)투쟁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원 조직화와 홍보를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 ○ 치협-복지부, 스케일링 보험확대 등에 대해 논의 (4. 10)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대한치과 의사협회를 방문해 김세영 협회장과 치과계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영 회장은 스케일링 보험 전면확대,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불법네트워크 치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태한 실장은 “스케일링이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점도 있어 정책결정을 빨리 하지는 않고 치협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효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홍순식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과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상근부회장, 이강운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 ○ 한의협, “발암 천연물신약 처방 즉각 중단하라” (4. 11)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며 처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 6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제약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암신약 처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사들은 식약처 등에 조속한 후속조치 시행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일 천연물신약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최대 16.1ppb)과 포름알데히드(최대 15.3ppb)가 검출됐으나,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 ○ 병협,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에 반발 (4. 12)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품대금 결제기일 3개월로 의무화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2일 “법률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협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의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 5. 질병/기타

#### ○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지침서 발간 (4. 1)

의학자와 언어학자가 공동 연구한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지침서가 나왔다. 은희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정인혁(가톨릭대학교 의대 해부학교실)·송영빈(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는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한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

들기'(커뮤니케이션북스)를 발간했다. 출판사측은 “지금까지는 의학용어 순화가 이미 만들어진 용어를 국어 어법에 맞게 바로 잡고 표준화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 책에서는 ‘기존의 용어는 물론이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 전문용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매우 실천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좌창’ ‘와우’ ‘단골’과 같은 난해한 의학용어가 각각 ‘여드름’ ‘달팽이’ ‘짧은뼈’ 등으로 순화됐다.

#### ○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가이드 책자 발간 (4.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민들이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해 안전사용가이드인 ‘프로포폴, 이런 점 주의하세요!’를 책자로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의 용도 ▲부작용 발생 안내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특성 및 의존자들의 증언 ▲약물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보호 기관 안내 등이다. 이번 책자는 최근 프로포폴을 불면증, 가벼운 성형 또는 피부과 치료 등에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등을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프로포폴은 국내에서 2011년 2월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됐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 의도하지 않게 중독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가이드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책자를 전국 250여개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수두백신 효과 14년 지속 (4. 3)

수두 예방 접종 효과가 14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오클랜드 카이저상설 백신연구센터 연구진은 수두와 헤르페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7585명의 어린이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상기와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5년 수두백신로 예방 접종을 받았으며 2826명은 2006-2009년 두 번째 접종을 받았다. 연구진이 추적조사한 결과, 예방 접종을 받은 어린이는 1000명당 수두 평균 발생률이 1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수두접종 세대들보다 평균 발생률이 9배 낮은 것으로 수두예방접종의 효과를 보증해 주는 결과다.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졌으나 두 번째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들은 수두가 발생하지 않았다. 헤르페스 대상 포진율은 이전 백신 시대에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상대 위험, 0.61)보다 백신접종을 받은 어린이들이 낮았다. 연구진은 수두백신의 예방 효과가 14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으며 연구논문은 ‘소아과’ 최신호에 게재됐다.

#### ○ 중국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7명으로 늘어 (4. 3)

중국에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환자가 7명으로 늘었다. 최근 상하이에서 H7N9형 AI 감염으로 사망자 2명 발생한 데 이어 감염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장쑤성 난징시 농산물시장에서 가축 도살업에 종사하고 있는 45세 여성과 쑤첸시 48세 여성, 쑤저우시 83세 남성, 창저우시 32세 여성 등이다. 이번에 발견된 H7N9형은 백신이 없으며 사람까지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처음이다. H7N9형 AI는 칠면조를 비롯한 조류에서만 발견됐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당국은 H7N9형 AI 바이러스의 근원지에 대해서 추적조사 중이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질병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H7N9형 AI에 대한 검역 등 대응 조치 강화를 지시했다.

#### ○ 일본산 에이즈 예방백신 세계 첫 실용화 착수 (4. 4)

일본 생명공학회사인 디나벡(DNAVEC)과 국제에이즈백신추진구상(IAVI)이 일본산 에이즈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양사는 영국과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향후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세계 최초로 실용화할 예정이다.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센다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HVJ(he-mafflutinating virus of Japan)’라고도 하며 인간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내장해 감염자의 코에 투여한다. 센다이 바이러스는 1~2주내에 소멸하지만, 유

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 신체의 면역 체계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게 된다.

#### ○ 일본 사회 풍진 대유행 (4. 5)

일본에서 풍진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 보고된 환자는 지난달 27일 현재 2418명으로 지난 5년간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환자 2353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비예방접종그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의하면 풍진 예방접종은 1994년까지 중학생 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40대 남성에서 풍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80% 수준이다. 풍진은 전염력이 강하여 집단 발생률이 높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50~60%에서 감염된다.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는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도 감염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보조하는 곳도 나오기 시작했으며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오는 6월경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 ○ 신종 AI 치사율 사스의 3배 - 중국 전문가 주장 (4. 8)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치사율이 10년 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저우 중의약대학 린싱둥 박사는 타이베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치사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7일 현재, H7N9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18명의 중국인 환자는 상하이 8명, 장쑤 6명, 저장 3명, 안후이 1명 등 1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상하이 4명, 저장 2명 등 모두 6명으로 치사율 33.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3년 5~8월 조사된 사스 평균 치사율 11%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어서 린싱둥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사람 간 전염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던 상하이시의 유사 H7N9 AI 환자는 검사 결과 H7N9 AI 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시와 저장성 항저우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메추리 등 가금류에서 H7N9형 AI 바이러스를 대거 발견했으며 시장을 폐쇄하고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 ○ 日서 진드기 유래 사망자 7명으로 늘어 (4. 11)

일본에서 진드기 유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이 SFTS 관련 정보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감염자는 11명, 사망자는 7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사가현 당국자는 농사를 짓는 60대 남성이 지난해 6월말 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가 옮기는 SFTS로 사망한 것을 뒤늦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발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후생노동성은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것일 뿐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다.